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규제순응도 결과보고서

2006년 12월

농 립 부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3
제2장	조사결과 요약	6
제3장	조사결과 분석	20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인지도	20
	2.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이해도	22
	3. 규정 명확성	24
	4. 규정 필요성	26
	5. 규정 준수의 적절성	28
	6. 규정의 목적부합성	30
	7. 규정 준수율	32
	8. 규정 집행력	34
	9. 벌칙부과의 적절성	36
	10. 판매 의향 가격	38
	11. 개선사항	41

● 부록 : 기본통계표 · 설문지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본 조사는 2006년부터 임의제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 제도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
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1. 조사대상

제목	항목	조사대상	표본수(명)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피규제집단(800명)	생산자	600
		유통업자	100
		판매업자	100
	집행공무원(200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8
		농협	23
		농업기술센터	37
		기타	2
	제3차집단(600명)	소비자단체	600
		농산물명예감시원	

II. 조사방법

2. 조사방법 :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3. 조사기간 : 2006년 10월 18일 ~ 10월 27일
4.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5. 표본추출방법 : 유의할당추출방법

III.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Programm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 for Win에 의해 분석됨

조 사 개 요

IV-1.
응답자
특성
·
피규제집단

구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성별	남성	724	90.5
	여성	76	9.5
연령	30대 이하	212	26.5
	40대	290	36.3
	50대 이상	298	37.3
지역	서울	10	1.3
	경기/인천	63	7.9
	대전/충청	175	21.9
	광주/전라	221	27.6
	대구/경북	135	16.9
	부산/울산/경남	119	14.9
	강원/제주	77	9.6
대상자	생산자	600	75.0
	유통업자	100	12.5
	판매업자	100	12.5

IV-2.
응답자
특성
·
집행공무원

구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성별	남성	171	85.5
	여성	29	14.5
연령	30대 이하	118	59.0
	40대	66	33.0
	50대 이상	16	8.0
지역	서울	1	0.5
	경기/인천	24	12.0
	대전/충청	38	19.0
	광주/전라	55	27.5
	대구/경북	29	14.5
	부산/울산/경남	25	12.5
	강원/제주	28	14.0
대상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8	69.0
	농협	23	11.5
	농업기술센터	37	18.5
	기타	2	1.0

조 사 개 요

IV-3.
응답자
특성
·
제3차집단

구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성별	남성	117	19.5
	여성	483	80.5
연령	30대 이하	147	24.5
	40대	293	48.8
	50대 이상	160	26.7
지역	서울	52	8.7
	경기/인천	121	20.2
	대전/충청	99	16.5
	광주/전라	99	16.5
	대구/경북	81	13.5
	부산/울산/경남	103	17.2
	강원/제주	45	7.5

제2장 조사결과 요약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인지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지도는 **피규제집단(N=800명)**은 88.3%, **제3차집단(N=600명)**은 74.0%로 나타남.

2.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이해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집행공무원(99.0%)**, **피규제집단(95.1%)**, **제3차집단(90.3%)**로 나타남.

(단위 : %)

대상집단 \ 이해도	이해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말만 들어본 정도이다
집행공무원	99.0	80.5	18.5	1.0
피규제집단	95.1	50.8	44.3	4.8
제3차집단	90.3	36.5	53.8%	9.7

3. 규정 명확성

- **피규제집단(N=800명)**은 ‘명확하다’는 72.6%, ‘명확하지 않다’는 25.6%이고, 명확하지 않는 이유(base=213명)로는 ‘신뢰성이 떨어짐’(22.2%, n=50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 어려움’(21.3%, n=48명), ‘농가 현실에 맞지 않음’(13.8%, n=31명) 등의 의견이 있음.

조사결과 요약

명확하지 않은 이유	사례수(명)	응답비율(%)
신뢰성이 떨어짐	50	22.2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 어려움	48	21.3
농가현실에 맞지 않음	31	13.8
시행초기단계의 문제점	25	11.1
홍보부족	21	9.3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음	7	3.1
소비자의 무관심	7	3.1
인증제와 중복돼 혼란스러움	7	3.1
중간단계에 문제발생소지가 많음	6	2.7
인력의 인프라구축이 안되었음	3	1.3
대형업체에서 허위·악용하는 경우 있음	1	0.4
상품이 꾸준히 조달되지 않음	1	0.4
소비자 입장만 생각함	1	0.4
수입품과 우리농산물의 혼돈	1	0.4
여러 인증제도의 통합 필요	1	0.4
일반농산물과 판로에서 큰 차이 없음	1	0.4
최소한의 보상가격이 필요	1	0.4
품질인증 등록해도 농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음	1	0.4
잘모름/무응답	12	5.3

조사결과 요약

- **집행공무원(N=200명)**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명확하다’는 의견이 90.5%(매우명확 : 49.5% + 대체로 명확 : 41.0%)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9.5%로 나타남. 명확하지 않은 이유(base=18명)로는 ‘시행초기단계의 문제점’(26.3%, n=5명), ‘인터넷·컴퓨터 사용이 어려움’(10.5%, n=2명), ‘제도적(법적) 장치가 없음’(10.5%, n=2명), ‘농가 현실에 맞지 않음’(10.5%, n=2명) 등의 의견이 있음.

명확하지 않은 이유	사례수(명)	응답비율(%)
시행초기단계의 문제점	5	26.3
인터넷·컴퓨터 사용이 어려움	2	10.5
제도적(법적) 장치가 없음	2	10.5
농가 현실에 맞지 않음	2	10.5
미흡한점이 많음	1	5.3
시스템이 잘 정착되지 않음	1	5.3
기록상의 문제	1	5.3
시설·관리 어려움	1	5.3
많은 농가의 농산물을 1곳의 작업장에서 구분·관리가 미흡	1	5.3
소비자의 무관심	1	5.3
홍보 부족	1	5.3
잘모름/무응답	3	15.8

4. 규정 필요성

- **피규제집단(N=800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93.4%(반드시 필요: 65.0% + 어느정도 필요: 28.4%), **집행공무원(N=200명)**은 98.5%(반드시 필요: 76.5% + 어느정도 필요: 22.0%), **제3차집단(N=600명)**은 98.2%(반드시 필요: 78.7 + 어느정도 필요: 19.5%)로 응답함.
- **집행공무원(98.8%) > 제3차집단(98.2%) > 피규제집단(93.4%)**의 순으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5. 규정 준수의 적절성

• **피규제집단(N=800명)**은 규정준수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65.5% (매우 적절하다: 19.1% +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46.4%)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34.0%(별로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28.4% + 전혀 적절하지 않다: 5.6%)로 나타남.

적절하지 않는 이유(base=306명)는 ‘현실적 기록/관리의 어려움’(19.2%, n=59명), ‘농민들의 이해부족 및 어려움’(16.3%, n=50명), ‘홍보 및 인식 부족’(16.0%, n=49명) 등의 의견이 있음.

적절하지 않은 이유	사례수(명)	응답비율(%)
현실적 기록/관리의 어려움	59	19.2
농민들의 이해부족 및 어려움	50	16.3
홍보 및 인식 부족	49	16.0
유통과정 및 소비자의 불신	31	10.1
시스템 미흡 및 구축의 어려움	28	9.1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롭다	24	7.8
노력에 비해 결과 부족	18	5.9
시행초기단계의 문제	12	3.9
제도적 뒷받침 부족	9	2.9
소비자 위주의 제도	4	1.3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	1.0
추가비용 발생	3	1.0
유통과정상 문제점 발생	3	1.0
중간과정 문제시 농가에 피해가 온다	2	0.7
농산물 가격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1	0.3
수확이 많이 부족하다	1	0.3
상품이 꾸준히 조달되지 않는다	1	0.3
지역별 농산물 특성의 분리 필요	1	0.3
리콜.보상문제의 애매함	1	0.3
인증농산물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서 나오기 때문	1	0.3
잘모름/무응답	6	2.0

조사결과 요약

- **집행공무원(N=200명)**은 규정준수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하다’는 80.5% (매우 적절하다: 26.0% +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54.5%)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19.5%로 나타남.

적절하지 않는 이유(base=44명)는 ‘시행초기단계의 문제점’(17.9%, n=7명), ‘시스템 구축 필요’(12.8%, n=5명), ‘생산자(농가)의 인식 부족’(7.7%, n=3명)에 대한 의견이 있음.

적절하지 않은 이유	사례수 (명)	응답비율 (%)
시행초기단계의 문제점	7	17.9
시스템 구축 필요	5	12.8
생산자(농가)의 인식 부족	3	7.7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	2	5.1
홍보 부족	2	5.1
고령·저학력의 농민들의 이해부족·컴퓨터활용 어려움	2	5.1
관리·감독의 어려움	2	5.1
현실적으로 기록(이력관리)의 어려움	2	5.1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2	5.1
농가 관리 필요	2	5.1
추적시스템의 미흡	2	5.1
제도 시행이 아직은 적절치 않음	2	5.1
생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2	5.1
유통과정상 문제점 발생	1	2.6
가공·유통시스템이 없어서	1	2.6
심한 규제, 기준대로 하기 어렵다, 까다로움	1	2.6
농민수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	1	2.6
유통망시스템의 미비	1	2.6
소비자위주의 제도임	1	2.6
생산자의 이익은 없기 때문에	1	2.6
이력추적 농산물이 많지 않음	1	2.6
실질적인 제도 인식이 안되어 있음	1	2.6
잘모름/무응답	4	10.3

6. 규정의 목적 부합성

- **피규제집단(N=800)**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목적에 78.3%(매우 부합: 34.9% + 어느정도 부합: 43.4%)가 부합된다고 응답하고, **집행공무원(N=200명)**은 95.5%(매우 부합: 45.0% + 어느정도 부합: 50.5%)가 부합된다고 응답함. 한편, **제3차집단(N=600명)**은 92.8%(매우 부합: 60.6% + 어느정도 부합: 32.2%)가 부합된다고 응답함.

7. 규정 준수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준수여부에 대해 **피규제집단(N=800명)**의 64.1% (매우 잘 지킨다: 18.7% + 어느 정도 잘 지킨다: 45.4%)는 ‘잘 지킨다’라고 응답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34.8%(그다지 잘 지키지 않는다: 29.6% + 전혀 지키지 않는다: 5.2%)로 나타남.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base=329명)는 ‘홍보 및 인식부족’(28.0%, n=93명), ‘현실적으로 기록/관리의 어려움’(9.9%, n=33명),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9.0%, n=30명) 등의 의견이 있음.

조사결과 요약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	사례수(명)	응답비율(%)
홍보 및 인식 부족	93	28.0
현실적으로 기록/관리의 어려움	33	9.9
돌아오는 혜택이 없음	30	9.0
규정이 까다롭고 복잡함	28	8.4
농가의 이해수준 부족 및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27	8.1
유통단계의 문제점	24	7.2
시행초기 단계의 문제점	22	6.6
제도 및 정부에 대한 불신	18	5.4
농가현실의 영세성	14	4.2
시스템구축 미흡	10	3.0
참여도 부족	8	2.4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는 부분	7	2.1
생산자.유통.판매자의 양심적인 문제	5	1.5
시설 부족	3	0.9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으로 제도가 무의미함	2	0.6
상업적인 영리목적이 큼	2	0.6
우수한 종자개발	1	0.3
일부업체만 시행하면서 대중호응도가 낮음	1	0.3
품목이 많지 않아서	1	0.3
잘모름/무응답	3	0.9

조사결과 요약

- 집행공무원(N=200명)**은 ‘잘 지킨다’는 72.0%(매우 잘지킨다: 16.5% + 어느 정도 잘 지킨다: 55.5%), ‘잘 지키지 않는다’는 28.0%(그다지 잘 지키지 않는다: 27.5% + 전혀 지키지 않는다: 0.5%)이고,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base=61명)는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44.6%, n=25명),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8.9%, n=5명), ‘홍보부족’(7.1%, n=4명) 등의 의견이 있음.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	사례수(명)	응답비율(%)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음	25	44.6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5	8.9
홍보 부족	4	7.1
소비자의 인식부족	3	5.4
참여도 부족	3	5.4
영농상의 어려움 때문	2	3.6
농가의 인식부족	2	3.6
기록상의 어려움	2	3.6
농가의 전산화 시스템 미비	2	3.6
농가의 이해수준 부족(농가의 노령화)	2	3.6
이력추적제가 현실적이지 못함	2	3.6
인증마크가 없는 것이 많음	1	1.8
바쁘고 번거롭다	1	1.8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서	1	1.8
시스템 구축 미흡	1	1.8
관리.감독의 어려움	1	1.8
관련 인력의 부족	1	1.8
중간유통단계에서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음	1	1.8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함	1	1.8
유통단계의 부족	1	1.8
잘모름/무응답	5	8.9

조사결과 요약

- **제3차집단(N=600명)**의 규정 준수율은 ‘잘 지킨다’는 50.0%(매우 잘 지킨다: 9.7% + 어느 정도 잘 지킨다: 40.3%), ‘잘 지키지 않는다’는 46.0%(전혀 지키지 않는다: 3.0% + 그다지 잘 지키지 않는다: 43.0%)로 피규제집단과 집행공무원보다 규정 준수율이 낮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base=286명)는 ‘홍보 및 인식부족’(36.4%, n=104명), ‘제도 및 정부에 대한 불신’(24.1%, n=69명), ‘시행초기 단계의 문제점’(13.3%, n=38명) 등의 의견이 있음.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	사례수(명)	응답비율(%)
홍보 및 인식부족	104	36.4
제도 및 정부에 대한 불신	69	24.1
시행초기 단계의 문제점	38	13.3
유통단계의 문제점	20	7.0
현실적으로 기록/관리의 어려움	14	4.9
시스템구축 미흡	13	4.5
참여도 부족	9	3.1
상업적인 영리목적이 큼	3	1.0
영농상의 어려움	2	0.7
시장과의 연계 필요	2	0.7
농가의 이해수준 부족(농가의 노령화)	2	0.7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가능하게	2	0.7
정부차원의 국산품 보호 필요	2	0.7
소규모 인증받기 어려움	1	0.3
농약 없이 좋은 상품이 나오지 않음	1	0.3
긴밀한 협조 필요	1	0.3
제도의 전문가 필요	1	0.3
품질이 떨어짐	1	0.3
인맥으로 인해서	1	0.3

8. 규정 집행력-집행공무원

- **집행공무원(N=200명)**은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가 71.0%로 가장 높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와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가 각각 14.5%로 나타남.

9. 벌칙부과의 적절성

- **피규제집단(N=800명)**은 벌칙부과의 적절성에 대해 ‘강화해야 한다’와 적당하다’가 각각 41.9%로 나타나고 ‘완화해야 한다’가 15.0%로 나타남.
- **집행공무원(N=200명)**은 ‘완화해야 한다’가 58.0%로 가장 높고,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32.0%), ‘강화해야 한다’(10.0%)의 순으로 나타남.
- **제3차집단(N=600명)**은 ‘강화해야 한다’가 48.8%로 가장 높고, ‘현재수준이면 적당하다’(41.0%), ‘완화해야 한다’(10.2%)의 순으로 나타남.
- 벌칙부과에 대해 피규제집단과 제3차집단의 경우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집행공무원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10. 판매의향 가격

- **피규제집단(N=800명)**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품 판매시 판매가 의향 가격에 대해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30.8%), ‘일반농산물 가격수준’(9.1%),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5% 높은 수준’(7.2%)의 순으로 나타남.
- **제3차집단(N=600명)**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5% 높은 수준’(24.8%), ‘일반농산물 가격수준’(24.2%),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13.5%)의 순으로 나타남.

11. 개선사항

- **피규제집단(N=800명)**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 의견이 26.0%(n=208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도보완 관련’(12.1%, n=97명), ‘행정적인 지원’(11.9%, n=95명) 등의 의견이 많음.

 - ☞ 세부항목별로는 ‘홍보부족’(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이 20.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 관리’(제도보완 관련)가 5.5%, ‘판로망 구축’(유통 및 판매 관련)이 4.3% 등의 요구가 많음.

- **집행공무원(N=200명)**은 ‘제도보완 관련’ 의견이 24.0%(n=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력확충’(23.0%, n=46명),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19.5%, n=39명), ‘행정적인 지원’(13.0%, n=26명) 등의 의견이 많음.

 - ☞ 세부항목별로 ‘홍보부족’(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이 1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 관리’(제도보완 관련)가 11.0%, ‘검사/단속 강화’(규제강화 관련)이 6.0% 등의 요구가 많음.

- **제3차집단(N=600명)**은 ‘규제강화 및 사후관리 단속강화 관련’에 대한 의견이 28.0%(n=16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20.5%, n=123명), ‘제도보완 관련’(9.8%, n=59명) 등의 의견이 많음.

 - ☞ 세부항목별로 ‘홍보부족’(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이 1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검사/단속 강화’(규제강화 및 사후관리 단속강화 관련)이 13.2%,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 관리’가 6.3% 등의 요구가 많음.

◆ 종합평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에 관한 규제사항은
사후관리 및 단속강화가 필요함.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한 인식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도가 모두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준수율이 낮음.

- ① 단속인력의 한계보완
- ② 단속방법의 합리화
- ③ 규제대안의 검토

(단위 : %)

항 목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규정인식	규정 인지도	88.3	-	74.0
	규정 이해도	95.1	99.0	90.3
	규정 명확성	72.6	90.5	-
규정인정	규정 필요성	93.4	98.5	98.2
	규정준수의 적절성	66.5	80.5	-
	규정의 목적부합성	78.3	95.5	92.8
규정준수	규정 준수율	64.1	72.0	50.0
	규정 집행력	-	71.0	-
	벌칙부과의 적절성	41.9(강화) 41.9(완화)	58.0(완화)	48.8(강화)

조사결과 요약

1. 규정인지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피규제집단이 88.3%, 제3차 집단이 74.0%로서 높은 편이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구체적 내용인지 + 대략 인지) 역시 피규제집단이 95.1%, 제3차집단이 90.3%로 매우 높음. (집행공무원이 99.0%)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규정 명확성 또한 피규제집단이 72.6%, 집행공무원이 90.5%로 나타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규정인정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 집단 모두 90.0%이상 (피규제집단: 93.4%, 집행공무원: 98.5%, 제3차집단: 98.2%)의 필요성을 인식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피규제집단이 66.5%, 집행공무원이 80.5%로 대부분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 상대적으로 피규제집단에서 적절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목적 측면은 피규제집단이 78.3%, 집행공무원 95.5%, 제3차집단 92.8%로 규제의 적절성과 마찬가지로 피규제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음.

3. 규정준수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잘 지켜진다'는 응답은 피규제집단 64.1%, 집행공무원 72.0%, 제3차집단 50.0% 나타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잘 지켜진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음.
- 벌칙부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3차집단 (48.8%), 피규제집단(41.9%)에서 높은 반면, 집행공무원은 '완화해야 한다'(58.0%)는 의견이 높음.

4. 순응도 개선 방안

□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강화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규제인지도, 규제인정도 등이 세 집단 모두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인식은 모두 공감하는 수준에 있음. 그러나 규제인지도와 규제인정도에 비해 규제준수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 기존 행정인력의 인력상의 한계를 개선하고 농산물 추적관리제도의 관리체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행정처분은 위반대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실정임.

- ☞ 실행 또는 벌금형에 대해 집행공무원의 경우는 완화하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나 실제 생산자 및 소비자는 기존의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따라서 기존의 행정처분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정인지도·인정도·준수도 향상을 위한 홍보수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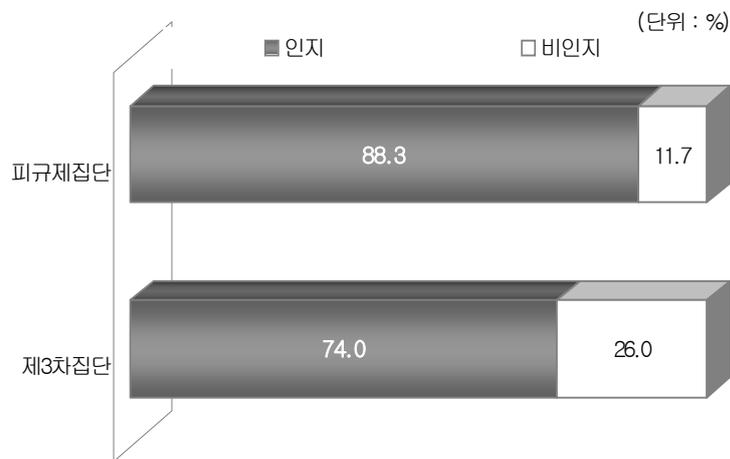
- 규정이 명확·적절하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서 홍보부족의 의견이 높게 나옴.

- ☞ 기존의 홍보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조사결과 분석

1. 농산물 추적관리제도 인지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지도는 **피규제집단(N=800명)**은 88.3%, **제3차집단(N=600명)**은 74.0%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 : 모든 계층에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대상자별로 유통업자의 인지도가 9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판매업자(92.0%), 생산자(86.0%)의 순으로 나타남.
- **제3차집단** : 모든 계층에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인지도>

(단위 : %)

특성 \ 집단		피규제집단		제3차집단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 체		88.3	11.7	74.0	26.0
성별	남자	90.7	9.3	85.5	14.5
	여자	64.5	35.5	71.2	28.8
연령별	30대이하	90.1	9.9	76.9	23.1
	40대	92.1	7.9	76.5	23.5
	50대이상	83.2	16.8	66.9	33.1
지역	서울	100.0	0.0	75.0	25.0
	경기/인천	96.8	3.2	69.4	30.6
	대전/충청	92.0	8.0	73.7	26.3
	광주/전라	84.6	15.4	82.8	17.2
	대구/경북	87.4	12.6	65.4	34.6
	부산/울산/경남	81.5	18.5	75.7	24.3
	강원/제주	93.5	6.5	77.8	22.2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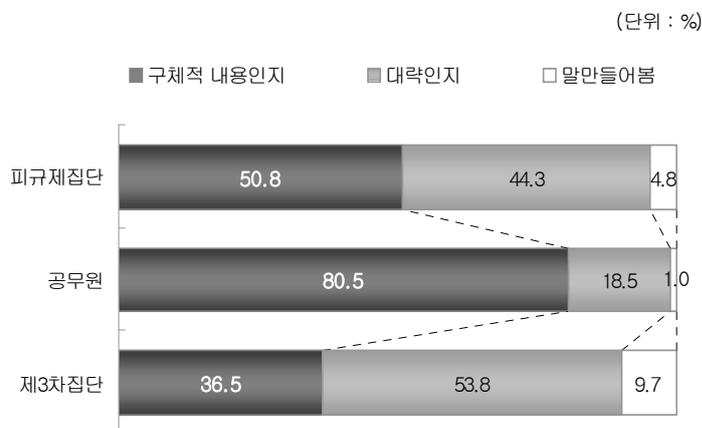
(단위 : %)

특성 \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있다	없다
전 체		800	88.3	11.7
대상자	생산자	600	86.0	14.0
	유통업자	100	98.0	2.0
	판매업자	100	92.0	8.0

2.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이해도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구체적 내용인지 + 대략인지)는 **집행공무원**이 9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피규제집단**(95.1%), **제3차집단**(90.3%)의 순으로 나타남.

제3차집단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 : 대상자별 이해도는 유통업자 10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자(94.6%), 판매업자(93.5%)의 순으로 나타남.

유통업자들이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집행공무원** : 특성별 이해도가 모두 95.0%이상으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3차집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90.3%로 피규제 집단과 집행공무원에 비해 이해도가 낮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이해도>

(단위 : %)

특성 \ 집단		피규제집단			공무원			제3차집단		
		구체적 내용 인지	대략 인지	이해도	구체적 내용 인지	대략 인지	이해도	구체적 내용 인지	대략 인지	이해도
전 체		50.8	44.3	95.1	80.5	18.5	99.0	36.5	53.8	90.3
성별	남자	52.5	43.4	95.9	81.3	17.5	98.8	40.0	54.0	94.0
	여자	28.6	57.1	85.7	75.9	24.1	100.0	35.5	53.8	89.2
연령별	30대이하	52.9	41.4	94.2	78.8	21.2	100.0	32.7	50.4	83.2
	40대	55.4	41.6	97.0	81.8	15.2	97.0	34.4	58.0	92.4
	50대이상	44.4	49.6	94.0	87.5	12.5	100.0	44.9	48.6	93.5
지역	서울	100.0	0.0	100.0	0.0	100.0	100.0	51.3	43.6	94.9
	경기/인천	57.4	42.6	100.0	75.0	25.0	100.0	36.9	51.2	88.1
	대전/충청	56.5	40.4	96.9	65.8	34.2	100.0	32.9	53.4	86.3
	광주/전라	51.9	40.6	92.5	85.5	12.7	98.2	47.6	48.8	96.3
	대구/경북	41.5	55.1	96.6	75.9	20.7	96.6	18.9	67.9	86.8
	부산/울산/경남	48.5	44.3	92.8	92.0	8.0	100.0	35.9	57.7	93.6
	강원/제주	41.7	52.8	94.5	92.9	7.1	100.0	28.6	54.3	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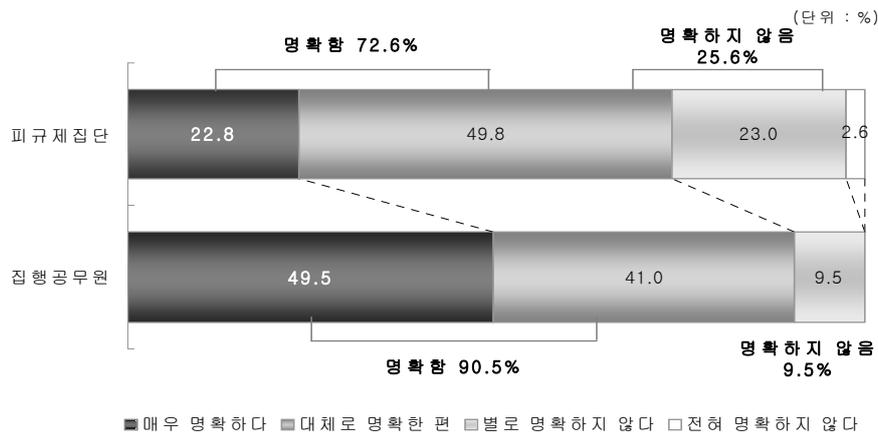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이해도>

(단위 : %)

특성 \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구체적 내용인지	대략적 내용인지	이해도
전 체		800	50.8	44.3	95.1
대상자	생산자	600	49.4	45.2	94.6
	유통업자	100	62.2	37.8	100.0
	판매업자	100	46.7	46.8	93.5

3. 규정 명확성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한 명확성(매우+대체로)은 **집행공무원 90.5%**, **피규제집단이 72.6%**로 나타남. 집행공무원이 피규제집단에 비해 규정이 명확하다는 의견이 높음.



- **피규제집단** : 모든 계층에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명확하다’는 의견이 높음.

대상자별로 ‘명확하다’는 의견은 유통업자가 77.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자(74.2%), 판매업자(59.0%)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자(base=213명)중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뢰성이 떨어짐’(22.2%, n=50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 어려움’(21.3%, n=48명), ‘농가 현실에 맞지 않음’(13.8%, n=31명) 등의 의견이 있음.

- **집행공무원** : 모든 계층에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명확하다’는 의견이 높음.

한편, ‘명확하지 않다’는 응답자(base=18명)중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시행초기단계의 문제점’(26.3%, n=5명), ‘인터넷·컴퓨터 사용이 어려움’(10.5%, n=2명), ‘제도적(법적) 장치가 없음’(10.5%, n=2명), ‘농가 현실에 맞지 않음’(10.5%, n=2명) 등의 의견이 있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명확성>

(단위 : %)

특성 \ 집단		피규제집단			공무원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잘모름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전 체		72.6	25.6	1.8	90.5	9.5
성별	남자	72.7	25.7	1.7	89.5	10.5
	여자	72.4	25.0	2.6	96.6	3.4
연령별	30대이하	71.2	27.8	0.9	89.8	10.2
	40대	72.8	26.6	0.7	90.9	9.1
	50대이상	73.5	23.2	3.4	93.8	6.3
지역	서울	80.0	20.0	0.0	100.0	0.0
	인천/경기	71.4	28.6	0.0	91.7	8.3
	대전/충청	76.6	22.3	1.1	78.9	21.1
	광주/전라	67.4	29.0	3.6	98.2	1.8
	대구/경북	71.1	28.1	0.7	96.6	3.4
	부산/울산/경남	75.6	22.7	1.7	96.0	4.0
	강원/제주	76.6	22.1	1.3	78.6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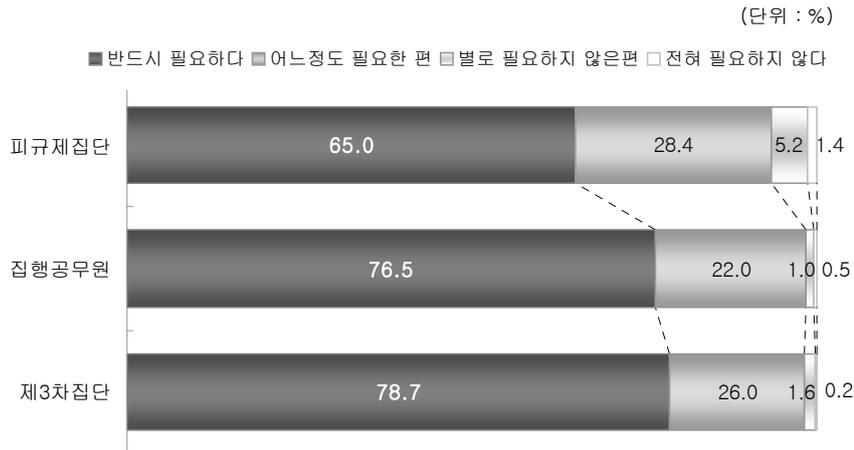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명확성>

(단위 : %)

특성 \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잘 모름
전 체		800	72.6	25.6	1.8
대상자	생산자	600	74.2	23.7	2.2
	유통업자	100	77.0	23.0	0.0
	판매업자	100	59.0	40.0	1.0

4. 규정 필요성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한 필요성은 **집행공무원**이 98.5%(반드시: 76.5% + 어느정도: 22.0%)로 가장 높고, **제3차집단**(98.2%), **피규제집단**(93.4%)의 순으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모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 대상자별 필요성은 유통업자가 9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자(93.5%), 판매업자(90.0%)의 순으로 나타남.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필요성>

(단위 : %)

특성 \ 집단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반드시	어느정도	필요성	반드시	어느정도	필요성	반드시	어느정도	필요성
전 체		65.0	28.4	93.4	76.5	22.0	98.5	78.7	19.5	98.2
성별	남자	65.7	27.3	93.1	78.4	19.9	98.2	75.2	19.7	94.9
	여자	57.9	38.2	96.1	65.5	34.5	100.0	79.5	19.5	99.0
연령별	30대이하	59.0	34.0	92.9	73.7	25.4	99.2	75.5	23.1	98.6
	40대	69.7	24.1	93.8	78.8	19.7	98.5	77.5	20.5	98.0
	50대이상	64.8	28.5	93.3	87.5	6.3	93.8	83.8	14.4	98.1
지역	서울	90.0	10.0	100.0	0.0	100.0	100.0	90.4	9.6	100.0
	인천/경기	54.0	38.1	92.1	70.8	25.0	95.8	81.8	16.5	98.3
	대전/충청	68.6	26.9	95.4	65.8	31.6	97.4	82.8	16.2	99.0
	광주/전라	66.1	21.7	87.8	78.2	20.0	98.2	85.9	12.1	98.0
	대구/경북	67.4	28.1	95.6	75.9	24.1	100.0	61.7	34.6	96.3
	부산/울산/경남	56.3	40.3	96.6	88.0	12.0	100.0	71.8	27.2	99.0
	강원/제주	68.8	27.3	96.1	85.7	14.3	100.0	77.8	17.8	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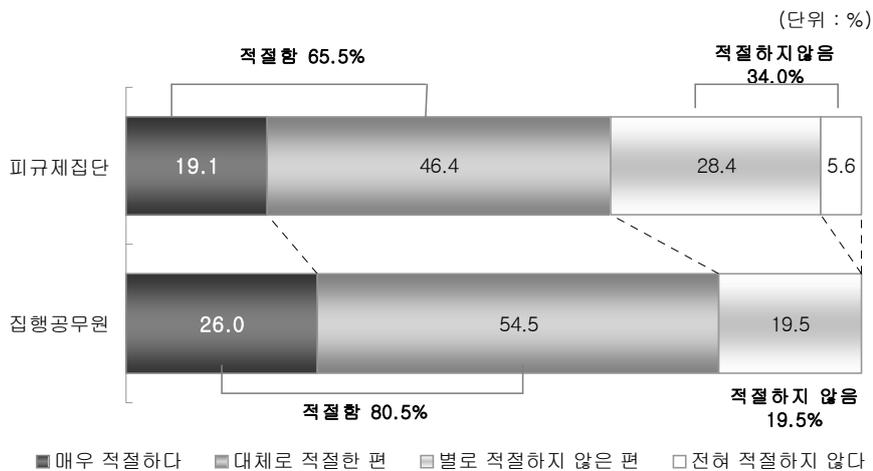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필요성>

(단위 : %)

특성 \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반드시	어느정도	필요성
전 체		800	65.0	28.4	93.4
대상자	생산자	600	65.7	27.8	93.5
	유통업자	100	72.0	24.0	96.0
	판매업자	100	54.0	36.0	90.0

5. 규정 준수의 적절성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적절성은 **집행공무원**이 80.5%(매우 적절: 26.0% + 대체로 적절: 54.5%), **피규제집단**이 65.5%(매우 적절: 19.1% + 대체로 적절: 46.4%)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준수하다는 의견이 65.5%로 집행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대상자별로 ‘적절하다’는 의견은 생산자가 69.3%로 가장 높고, 유통업자(59.0%), 판매업자(49.0%)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준수하기 ‘적절하지 않다’(base=306명)는 의견은 ‘현실적 기록/관리의 어려움’(19.2%, n=59명), ‘농민들의 이해부족 및 어려움’(16.3%, n=50명), ‘홍보 및 인식 부족’(16.0%, n=49명) 등의 의견이 있음.
- **집행공무원** : 대부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준수하기 ‘적절하다’라고 응답함. 한편, 준수하기 ‘적절하지 않다’(base=44명)는 의견은 ‘시행초기단계의 문제점’(17.9%, n=7명), ‘시스템 구축 필요’(12.8%, n=5명), ‘생산자(농가)의 인식 부족’(7.7%, n=3명) 등의 의견이 있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적절성>

(단위 : %)

특성		집단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매우적절	대체로 적절	적절성	매우적절	대체로 적절	적절성
전 체			19.1	46.4	65.5	26.0	54.5	80.5
성별	남자		19.5	47.1	66.6	29.2	50.3	79.5
	여자		15.8	39.5	55.3	6.9	79.3	86.2
연령별	30대이하		11.8	45.8	57.5	25.4	55.1	80.5
	40대		21.0	45.5	66.6	25.8	51.5	77.3
	50대이상		22.5	47.7	70.1	31.3	62.5	93.8
지역	서울		20.0	50.0	70.0	0.0	100.0	100.0
	인천/경기		15.9	52.4	68.3	25.0	54.2	79.2
	대전/충청		25.7	53.7	79.4	10.5	63.2	73.7
	광주/전라		14.9	38.9	53.8	20.0	58.2	78.2
	대구/경북		25.2	43.0	68.1	27.6	58.6	86.2
	부산/울산/경남		13.4	51.3	64.7	52.0	36.0	88.0
	강원/제주		16.9	44.2	61.0	35.7	46.4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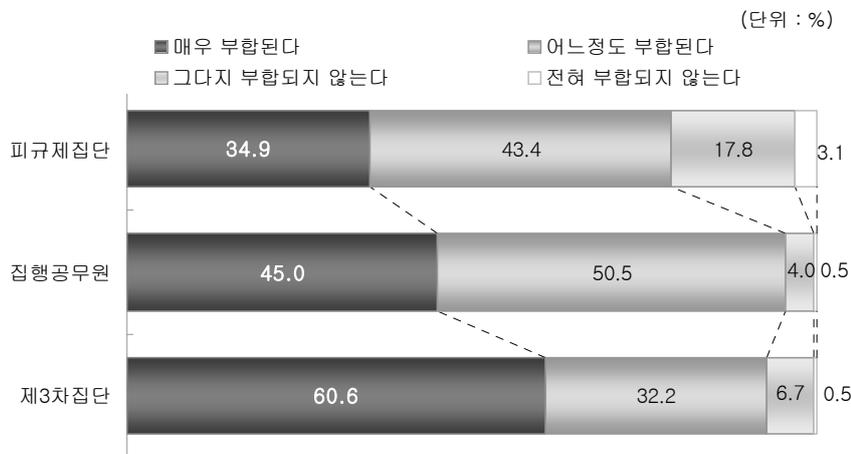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적절성>

(단위 : %)

특성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매우적절	대체로 적절	적절성
전 체			800	19.1	46.4	65.5
대상자	생산자		600	21.0	48.3	69.3
	유통업자		100	17.0	42.0	59.0
	판매업자		100	10.0	39.0	49.0

6. 규정의 목적부합성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목적과 ‘부합된다’는 의견은 **집행공무원**이 95.5%(매우 부합:45.0% + 어느정도 부합:5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3차집단**(92.8%), **피규제집단**(78.3%)의 순으로 나타남.



- **피규제집단** : 여성(81.6%), 40대(80.3%), 대구/경북(86.7%)에서 ‘부합된다’는 응답이 높음.

대상자별로 ‘부합된다’는 의견은 유통업자가 8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자(78.7%), 판매업자(72.0%)의 순으로 나타남.

- **집행공무원** : 대부분의 응답자 층에서 90.0%이상 ‘부합된다’고 응답함.
- **제3차집단** : 여성(93.8%), 50대 이상(93.8%), 부산/울산/경남(96.1%)에서 ‘부합된다’는 응답이 높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목적부합성>

(단위 : %)

특성 \ 집단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매우 부합	어느정도 부합	목적 부합성	매우 부합	어느정도 부합	목적 부합성	매우 부합	어느정도 부합	목적 부합성
전 체		34.9	43.4	78.3	45.0	50.5	95.5	60.7	32.2	92.8
성별	남자	34.8	43.1	77.9	46.8	48.0	94.7	70.1	18.8	88.9
	여자	35.5	46.1	81.6	34.5	65.5	100.0	58.4	35.4	93.8
연령별	30대이하	31.1	44.3	75.5	43.2	54.2	97.5	57.8	34.7	92.5
	40대	37.2	43.1	80.3	45.5	45.5	90.9	60.8	31.7	92.5
	50대이상	35.2	43.0	78.2	56.3	43.8	100.0	63.1	30.6	93.8
지역	서울	10.0	60.0	70.0	0.0	100.0	100.0	71.2	23.1	94.2
	인천/경기	33.3	38.1	71.4	37.5	54.2	91.7	64.5	28.9	93.4
	대전/충청	31.4	44.6	76.0	31.6	57.9	89.5	63.6	28.3	91.9
	광주/전라	38.5	37.6	76.0	41.8	54.5	96.4	66.7	29.3	96.0
	대구/경북	40.7	45.9	86.7	44.8	55.2	100.0	49.4	38.3	87.7
	부산/울산/경남	34.5	47.9	82.4	68.0	28.0	96.0	54.4	41.7	96.1
	강원/제주	27.3	48.1	75.3	57.1	42.9	100.0	53.3	33.3	86.7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목적부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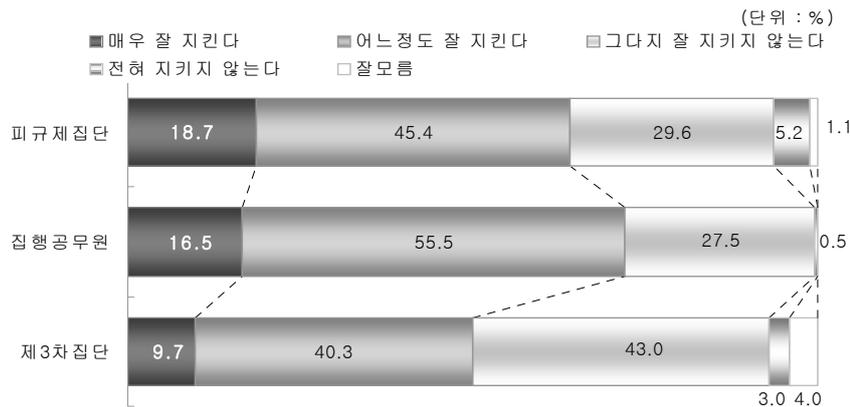
(단위 : %)

특성 \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매우 부합	어느정도부합	목적부합성
전 체		800	34.9	43.4	78.3
대상자	생산자	600	34.7	44.0	78.7
	유통업자	100	41.0	41.0	82.0
	판매업자	100	30.0	42.0	72.0

7. 규정 준수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잘 지킨다’는 의견이 집행공무원이 72.0% (매우 잘 지킨다: 16.5% + 어느정도 잘 지킨다: 5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피규제집단**(64.1%), **제3차집단**(50.0%)의 순으로 나타남.

제3차집단에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준수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음.



- **피규제집단** : 남성(64.2%), 30대 이하(65.1%), 대전/충청(79.4%)에서 ‘잘 지킨다’는 의견이 높음. 대상자별로는 생산자가 66.3%로 가장 높고, 유통업자(65.0%), 판매업자(50.0%)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잘 지키는 않는다’(base=329명)는 의견은 ‘홍보 및 인식부족’(28.0%, n=93명), ‘현실적 기록/관리의 어려움’(9.9%, n=33명), ‘돌아오는 혜택이 없음’(9.0%, n=30명) 등의 의견이 있음.

- **집행공무원** : 남성(72.5%), 50대 이상(81.3%), 서울(100.0%)에서 ‘잘 지킨다’는 의견이 높고 ‘잘 지키지 않는다’(base=61명)는 의견은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음’(44.6%, n=25명),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8.9%, n=5명), ‘홍보부족’(7.1%, n=4명) 등의 의견이 있음.
- **제3차집단** : 여성(52.8%), 40대와 50대 이상(51.9%), 대전/충청(59.6%)에서 ‘잘 지킨다’는 의견이 높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base=286명)는 의견은 ‘홍보 및 인식부족’(36.4%, n=104명), ‘제도 및 정부에 대한 불신’(24.1%, n=69명), ‘시행초기 단계의 문제점’(13.3%, n=38명) 등의 의견이 있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준수율>

(단위 : %)

특성 \ 집단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매우 잘지킨다	어느정도 잘지킨다	준수율	매우 잘지킨다	어느정도 잘지킨다	준수율	매우 잘지킨다	어느정도 잘지킨다	준수율
전 체		18.7	45.4	64.1	16.5	55.5	72.0	9.7	40.3	50.0
성별	남자	18.6	45.6	64.2	17.5	55.0	72.5	6.0	32.5	38.5
	여자	19.7	43.4	63.2	10.3	58.6	69.0	10.6	42.2	52.8
연령별	30대이하	15.1	50.0	65.1	9.3	61.0	70.3	4.8	39.5	44.2
	40대	21.0	43.4	64.5	22.7	50.0	72.7	8.2	43.7	51.9
	50대이상	19.1	44.0	63.1	43.8	37.5	81.3	16.9	35.0	51.9
지역	서울	30.0	40.0	70.0	0.0	100.0	100.0	7.7	42.3	50.0
	인천/경기	11.1	50.8	61.9	0.0	62.5	62.5	5.0	44.6	49.6
	대전/충청	31.4	48.0	79.4	0.0	50.0	50.0	16.2	43.4	59.6
	광주/전라	18.1	39.4	57.5	23.6	50.9	74.5	20.2	25.3	45.5
	대구/경북	18.5	54.1	72.6	27.6	55.2	82.8	2.5	42.0	44.4
	부산/울산/경남	8.4	46.2	54.6	32.0	64.0	96.0	7.8	49.5	57.3
	강원/제주	13.0	36.4	49.4	14.3	57.1	71.4	4.4	28.9	33.3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준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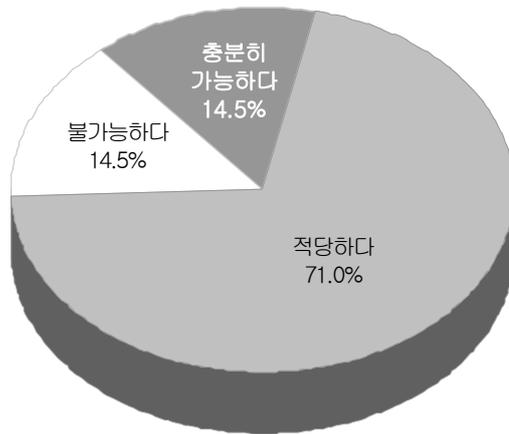
(단위 : %)

특성 \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매우 잘 지킨다	어느정도 잘 지킨다	준수율
전 체		800	18.7	45.4	64.1
대상자	생산자	600	19.7	46.6	66.3
	유통업자	100	17.0	48.0	65.0
	판매업자	100	15.0	35.0	50.0

8. 규정 집행력(Base=집행공무원, N=200명)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집행력에 대한 **집행공무원**의 의견은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가 71.0%로 가장 높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와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가 각각 14.5%로 나타남.

대부분의 집행공무원들은 현재의 집행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집행공무원** : 여성(79.3%), 30대 이하(75.4%), 서울(100.0%)에서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집행력(base=집행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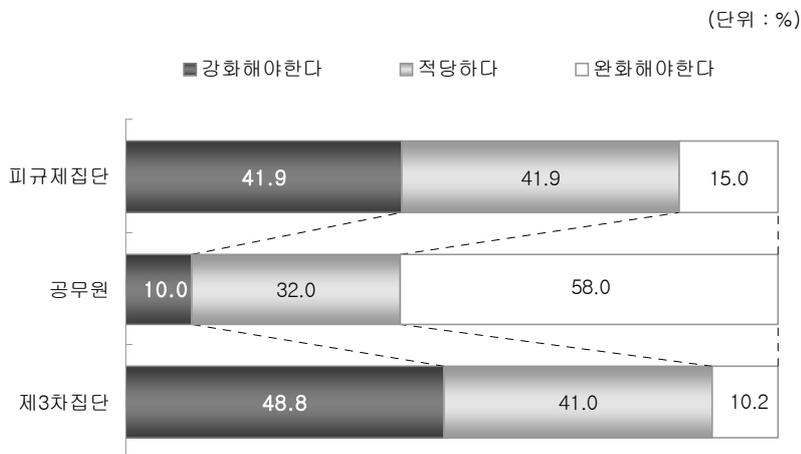
(단위 : %)

인구특성 \ 집행공무원		사례수 (명)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충분히 가능	현재의 집행력 정도면 적당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전 체		200	14.5	71.0	14.5
성별	남자	171	14.6	69.6	15.8
	여자	29	13.8	79.3	6.9
연령별	30대이하	118	16.1	75.4	8.5
	40대	66	13.6	62.1	24.2
	50대이상	16	6.3	75.0	18.8
지역	서울	1	0.0	100.0	0.0
	인천/경기	24	8.3	58.3	33.3
	대전/충청	38	13.2	65.8	21.1
	광주/전라	55	16.4	74.5	9.1
	대구/경북	29	24.1	65.5	10.3
	부산/울산/경남	25	12.0	84.0	4.0
	강원/제주	28	10.7	75.0	14.3

9. 벌칙부과의 적절성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해 벌칙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제3차집단(48.8%), 피규제집단(41.9%), 집행공무원(10.0%)**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집행공무원(58.0%), 피규제집단(15.0%), 제3차집단(10.2%)**의 순으로 나타남.

제3차집단과 피규제집단은 현재의 벌칙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집행공무원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 **피규제집단** :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42.1%), 50대 이상(46.6%), 서울(60.0%)에서 높음.

대상자별 생산자(47.3%)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고, 유통업체(49.0%)와 판매업자(55.0%)는 ‘현재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높음.

- **집행공무원** :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특히 여성(62.1%), 50대 이상(75.0%), 서울(100.0%)에서 높음.
- **제3차집단** :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특히 남성(53.8%), 30대 이하(49.7%), 경기/인천(66.1%)에서 높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벌칙부과의 적절성>

(단위 : %)

인구특성		집단	강화함			완화함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피규제집단	집행공무원	제3차집단
전 체			41.9	10.0	48.8	15.0	58.0	10.2
성별	남자		42.1	9.9	53.8	15.5	57.3	7.7
	여자		39.5	10.3	47.6	10.5	62.1	10.8
연령별	30대이하		32.1	10.2	49.7	16.0	56.8	6.1
	40대		44.1	9.1	49.5	16.9	56.1	9.9
	50대이상		46.6	12.5	46.9	12.4	75.0	14.4
지역	서울		60.0	0.0	50.0	20.0	100.0	11.5
	인천/경기		27.0	20.8	66.1	25.4	54.2	7.4
	대전/충청		54.3	10.5	43.4	8.0	68.4	8.1
	광주/전라		38.5	3.6	44.4	21.3	63.6	15.2
	대구/경북		41.5	3.4	44.4	11.9	58.6	11.1
	부산/울산/경남		37.8	24.0	45.6	11.8	40.0	10.7
	강원/제주		40.3	7.1	37.8	14.3	50.0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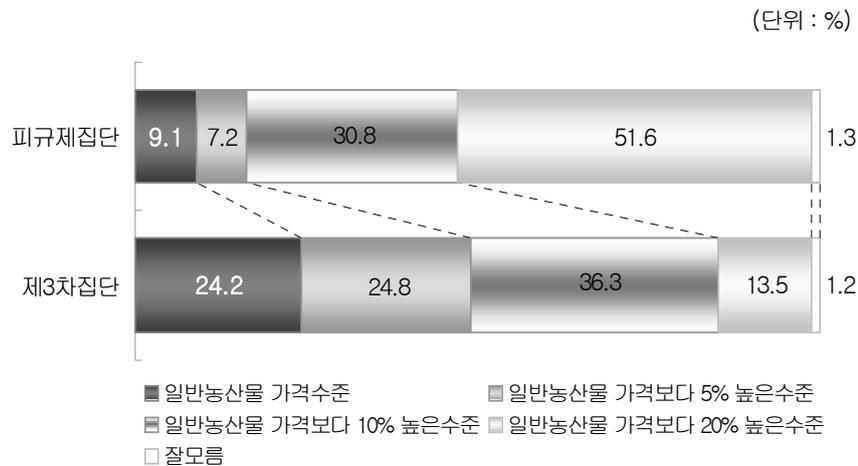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대상자별 벌칙부과의 적절성>

(단위 : %)

특성		집단	사례수 (명)	피규제집단		
				강화함	현재수준적당	완화함
전 체			800	41.9	41.9	15.0
대상자	생산자		600	47.3	38.5	13.0
	유통업자		100	31.0	49.0	19.0
	판매업자		100	20.0	55.0	23.0

10. 판매의향 가격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품 판매시 판매가 의향가격에 대해 **피규제집단**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51.6%), **제3차집단**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36.3%)이란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피규제집단** : 대부분 판매가격을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단, 서울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50.0%)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대상자별로 생산자(58.0%)와 유통업자(44.0%)는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고, 판매업자는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 ‘일반농산물 가격수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8.0%로 높게 나타남.

- **제3차집단** : 대부분 판매가격을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단, 서울은 ‘일반 농산물 가격보다 5% 높은 수준’(42.3%)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음.)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품 판매의향가격-피규제집단>

(단위 : %)

인구특성		수준	사례수 (명)	일반농산물	일반농산물	일반농산물	일반농산물 가격수준	잘모름
				가격보다 5% 높은 수준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		
전 체			800	7.3	30.8	51.6	9.1	1.3
성별	남자		724	6.4	31.4	53.0	8.1	1.1
	여자		76	15.8	25.0	38.2	18.4	2.6
연령별	30대이하		212	14.2	31.6	35.4	17.5	1.4
	40대		290	4.5	30.0	56.9	7.9	0.7
	50대이상		298	5.0	30.9	58.1	4.4	1.7
지역	서울		10	10.0	50.0	20.0	20.0	0.0
	인천/경기		63	12.7	25.4	50.8	11.1	0.0
	대전/충청		175	8.6	28.6	54.3	6.3	2.3
	광주/전라		221	5.4	27.1	55.7	10.9	0.9
	대구/경북		135	7.4	33.3	52.6	6.7	0.0
	부산/울산/경남		119	5.0	34.5	50.4	6.7	3.4
	강원/제주		77	7.8	37.7	39.0	15.6	0.0
대상자	생산자		600	4.5	30.5	58.0	5.7	1.3
	유통업자		100	9.0	35.0	44.0	11.0	1.0
	판매업자		100	22.0	28.0	21.0	28.0	1.0

조사결과 분석

<농산물 이력추적관리품 판매의향가격-제3차집단>

(단위 : %)

인구특성 \ 수준		사례수 (명)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5% 높은 수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10% 높은 수준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	일반농산물 가격수준	잘 모름
전 체		600	24.8	36.3	13.5	24.2	1.2
성별	남자	117	12.8	35.0	35.0	13.7	3.4
	여자	483	27.7	36.6	8.3	26.7	0.6
연령별	30대이하	147	26.5	29.9	10.2	32.7	0.7
	40대	293	22.5	38.6	17.7	19.5	1.7
	50대이상	160	27.5	38.1	8.8	25.0	0.6
지역	서울	52	42.3	34.6	7.7	15.4	0.0
	인천/경기	121	27.3	33.9	12.4	24.8	1.7
	대전/충청	99	23.2	36.4	13.1	27.3	0.0
	광주/전라	99	19.2	40.4	16.2	23.2	1.0
	대구/경북	81	21.0	43.2	18.5	16.0	1.2
	부산/울산/경남	103	27.2	31.1	7.8	33.0	1.0
	강원/제주	45	15.6	35.6	22.2	22.2	4.4

11. 개선사항

- **피규제집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 의견이 26.0%(n=2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도보완 관련’(12.1%, n=97명), ‘행정적인 지원’(11.9%, n=95명) 등의 의견이 많음.

피규제집단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	208	26
홍보 부족	164	20.5
교육강화	28	3.5
공급에 비해 수요가 따라오지 못함	3	0.4
제도.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3	0.4
친환경농산물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3	0.4
방문 지도	2	0.3
제도 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	0.3
담당자(감시원) 교육 전문화	1	0.1
지속적 교육	1	0.1
체계적.주기적인 이론교육	1	0.1
[제도보완 관련]	97	12.1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관리 바람(활성화)	44	5.5
시스템 구축	13	1.6
비슷한 규제의 일원화	9	1.1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8	1.0
규제가 까다롭다	6	0.8
체계적인 제도	6	0.8
기준 명확히	4	0.5
재검 제도 필요	3	0.4
심사 완화	1	0.1
제도의 다양한 범위에서 시행방법 필요	1	0.1
탁상 행정 철폐	1	0.1
현장 의견 수렴	1	0.1

조사결과 분석

피규제집단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행정적인 지원]	95	11.9
보조금 지원	20	2.5
시설 지원	17	2.1
현실적인 정책	12	1.5
행정적 지원 필요	10	1.3
지원 보조	8	1.0
표시제도를 잘 지키는 농가에 대해 혜택	6	0.8
손실부분의 지원	4	0.5
생산자에 대한 지원 필요	3	0.4
전산시스템 구축	3	0.4
처벌이 아닌 보상제도 필요	3	0.4
친환경 재배농가의 수익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3	0.4
유통업자에 대한 비용지원	2	0.3
공평한 지원	1	0.1
관리기관의 육성	1	0.1
예산 지원	1	0.1
친환경 농가에 적당한 지원이 있어야	1	0.1
[규제강화 관련 및 사후관리 단속 강화]	74	9.3
검사/단속 강화	31	3.9
지속적 사후관리	12	1.5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	8	1.0
유통단계의 관리.감독 철저히	4	0.5
규제.기준 완화	3	0.4
제도의 강화	3	0.4
벌칙 완화	2	0.3
정부의 관리 강화	2	0.3
벌칙.벌금의 차별화	1	0.1
법적 강제성 축소	1	0.1
생산자 관리 강화	1	0.1
악용하는 사람들이 특혜받지 않도록 개선	1	0.1
유통업자.판매업자 단속 강화	1	0.1
인증농산물의 구분 명확히	1	0.1
인증전문기관 구비조건 강화	1	0.1
잔류농약 기준 엄격히	1	0.1
품질다른 제품이 섞이지않게 관리	1	0.1

조사결과 분석

피규제집단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유통 및 판매관련]	66	8.3
판로망 구축	34	4.3
유통과정 보완.활성화	11	1.4
유통.판매망 확대.개선	9	1.1
매장시스템 확장	3	0.4
유통과정내 비리 줄여 농가수익 확보	3	0.4
유통부문의 이력추적제 활성화	2	0.3
판매처 확보	2	0.3
수입개방 막아주었으면	1	0.1
유통.판매업의 제도화	1	0.1
[가격 및 물가조정 관련]	60	7.5
가격 보장 필요	31	3.9
인증농산물의 가격 높여주길	15	1.9
적절한 가격 조정	8	1.0
인센티브(수수료)를 주었으면 함	3	0.4
가격 문제	1	0.1
인증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 동일하게	1	0.1
품목당 가격이 통일성있게	1	0.1
[인증/서류 등 절차의 간소화]	8	1.0
서류 간소화	4	0.5
인증받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림	2	0.3
절차가 까다롭다	2	0.3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6	0.8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5	0.6
소비자가 신뢰할수 있게	1	0.1
[객관적/공정한 인증기준]	4	0.5
형식적인 인증이 되지않게	2	0.3
투명한 운영	1	0.1
공평한 인증	1	0.1

조사결과 분석

피규제집단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기타]	104	13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정책/농민입장에서	26	3.3
농민 지원/보호 대책	8	1.0
소비자의 인식 개선	7	0.9
신뢰감 형성할 수 있는 기준	6	0.8
인력 확충	6	0.8
생산자.유통.판매자의 인식 개선	5	0.6
인증품목의 다양화	4	0.5
공무원 현장조사	3	0.4
생산자.상품품질 정보 제공	3	0.4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믿을수 있는 농산물 생산되길	2	0.3
장시간의 준비후 시행 하기 바람	2	0.3
포장방법의 통일성	2	0.3
품목에 대한 기준 관리	2	0.3
거름 지원	1	0.1
과수시설 마련	1	0.1
관리번호가 생산자와 연결되게	1	0.1
농가에 대한 1:1 컨설팅	1	0.1
농림부의 책임의식	1	0.1
농산물 제도 없어지는 것이 좋음	1	0.1
농약관리 철저히	1	0.1
농약종류 다양하게	1	0.1
농업 생산성 확보	1	0.1
농촌의 인력육성(고등학교.대학교 등)	1	0.1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1	0.1
민간인증기관의 수준과 전문성 갖출것	1	0.1
사이트 활성화	1	0.1
산지에서 검사 바람	1	0.1
생산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	1	0.1
생산자.유통자의 어려움 파악하길	1	0.1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혜택이 가게	1	0.1
수입품과 국산품 구별가능하게	1	0.1
시판품 잔류 농약검사 할 수 있는 시스템 요구	1	0.1
유통마진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융화가 안됨	1	0.1
인증기관 공무원의 인식개선	1	0.1
일이 많아 번거롭다	1	0.1
임대생산자들이 사실확인이 어렵다	1	0.1
자발적 참여가능하도록 제도마련	1	0.1
정확한 기록	1	0.1
지역별 특이작물에 집중관리	1	0.1
질적 향상 바람	1	0.1
한미FTA의 올바른 처리	1	0.1
[모름/무응답]	207	25.9

조사결과 분석

- **집행공무원** : ‘제도보완 관련’ 의견이 24.0%(n=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력확충’(23.0%, n=46명),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19.5%, n=39명), ‘행정적인 지원’(13.0%, n=26명) 등의 의견이 많음.

집행공무원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제도보완 관련]	48	24.0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관리 바람(활성화)	22	11.0
시스템 구축	9	4.5
체계적인 제도	6	3.0
비슷한 규제의 일원화	4	2.0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3	1.5
농가에서 이력추적가능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	1.0
제도의 다양한 범위에서 시행방법 필요	1	0.5
주관부서의 일원화	1	0.5
[인력 확충]	46	23.0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	39	19.5
홍보 부족	27	13.5
교육강화	10	5.0
담당자(감시원) 교육 전문화	1	0.5
체계적.주기적인 이론교육	1	0.5
[행정적인 지원]	26	13.0
전산시스템 구축	8	4.0
시설 지원	5	2.5
예산 지원	5	2.5
현실적인 정책	3	1.5
관리기관의 육성	1	0.5
보조금 지원	1	0.5
지원 보조	1	0.5
처벌이 아닌 보상제도 필요	1	0.5
행정적 지원 필요	1	0.5

조사결과 분석

집행공무원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규제강화 관련 및 사후관리 단속 강화]	25	12.5
검사/단속 강화	12	6.0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	5	2.5
지속적 사후관리	4	2.0
규제.기준 완화	2	1.0
생산자 관리 강화	1	0.5
정부의 관리 강화	1	0.5
[가격 및 물가조정 관련]	8	4.0
인센티브(수수료)를 주었으면 함	7	3.5
인증농산물의 가격 높여주길	1	0.5
[유통 및 판매관련]	5	2.5
유통과정 보완.활성화	2	1.0
유통.판매망 확대.개선	1	0.5
유통과정내 비리 줄여 농가수익 확보	1	0.5
유통부문의 이력추적제 활성화	1	0.5
[인증/서류 등 절차의 간소화]	4	2.0
절차가 까다롭다	2	1.0
서류 간소화	1	0.5
인증검사비용이 비싸다	1	0.5

조사결과 분석

집행공무원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2	1.0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1	0.5
알기 쉬운 표기	1	0.5
[기타]	23	34.0
인증품목의 다양화	6	3.0
생산자 고령화에 대한 대책마련	5	2.5
장시간의 준비후 시행 하기 바람	3	1.5
품목에 대한 기준 관리	2	1.0
더많은 인증기관 설치	1	0.5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혜택이 가게	1	0.5
소비자의 인식 개선	1	0.5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정책/농민입장에서	1	0.5
잘하고 있다	1	0.5
친환경인증과 이력제 의무화	1	0.5
판매단계에서 등록이 쉽게 되도록	1	0.5
[모름/무응답]	20	10.0

조사결과 분석

- **제3차집단** :‘규제강화 관련 및 사후관리 단속 강화’의 의견이 28.0%(n=16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20.5%, n=123명), ‘제도보완 관련’(9.8%, n=59명) 등의 의견이 많음.

집행공무원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규제강화 관련 및 사후관리 단속 강화]	168	28.0
검사/단속 강화	79	13.2
지속적 사후관리	21	3.5
법적 규제 강화	19	3.2
감시원단의 활동 횟수 증가/활성화	12	2.0
인증기관의 관리 강화	9	1.5
제도의 강화	5	0.8
생산자 관리 강화	4	0.7
유통단계의 관리.감독 철저히	4	0.7
유통업자.판매업자 단속 강화	3	0.5
감시원의 홍보예산 지원	2	0.3
감시원의 활동 영역 증가	2	0.3
규제.기준 완화	2	0.3
정부의 관리 강화	2	0.3
고가품에는 벌금.벌칙 강화	1	0.2
벌칙.벌금의 차별화	1	0.2
융통성있는 규제적용	1	0.2
친환경농산물의 농산물이력추적제도 강화	1	0.2
[홍보 및 교육활성화 관련]	123	20.5
홍보 부족	84	14.0
교육강화	31	5.2
담당자(감시원) 교육 전문화	6	1.0
모니터 활동	1	0.2
체계적.주기적인 이론교육	1	0.2

조사결과 분석

집행공무원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제도보완 관련]	59	9.8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관리 바람(활성화)	38	6.3
체계적인 제도	9	1.5
시스템 구축	5	0.8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	3	0.5
탁상 행정 철폐	2	0.3
가공식품에도 친환경 농산물 표시	1	0.2
현장 의견 수렴	1	0.2
[행정적인 지원]	42	7.0
보조금 지원	11	1.8
지원 보조	9	1.5
행정적 지원 필요	5	0.8
생산자에 대한 지원 필요	4	0.7
예산 지원	4	0.7
표시제도를 잘 지키는 농가에 대해 혜택	3	0.5
친환경 재배농가의 수익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2	0.3
관리기관의 육성	1	0.2
담당 부서의 명확화	1	0.2
친환경 농가에 적당한 지원이 있어야	1	0.2
현실적인 정책	1	0.2

조사결과 분석

집행공무원 응답내용	사례수(명)	응답비율(%)
[유통 및 판매관련]	33	5.5
수입개방 막아주었으면	10	1.7
직거래장터 활성화	7	1.2
관로망 구축	5	0.8
매장시스템 확장	3	0.5
재래시장에서도 살 수 있길 바람	3	0.5
유통.판매망 확대.개선	2	0.3
유통과정 보완.활성화	2	0.3
유통과정내 비리 줄여 농가수익 확보	1	0.2
[가격 및 물가조정 관련]	11	1.8
적절한 가격 조정	4	0.7
가격 보장 필요	2	0.3
인증농산물의 가격 높여주길	2	0.3
가격 문제	1	0.2
이력추적관리품의 가격 낮춰주길	1	0.2
인센티브(수수료)를 주었으면 함	1	0.2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7	1.2
소비자가 신뢰할수 있게	5	0.8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1	0.2
일반과 친환경농산물 구분 바람	1	0.2

조사결과 분석

[기타]	98	16.3
인력 확충	12	2.0
원산지.날짜기한표시 분명하게	11	1.8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정책/농민입장에서	9	1.5
농민 지원/보호 대책	9	1.5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혜택이 가게	8	1.3
수입품과 국산품 구별가능하게	6	1.0
공무원 현장조사	4	0.7
국산품 보호	4	0.7
신뢰감 형성할 수 있는 기준	4	0.7
인증품목의 다양화	4	0.7
잘하고 있다	4	0.7
감시원단의 권한 필요	3	0.5
생산.유통.판매자의 인식 개선	3	0.5
소비자와 생산자가 보호되게	3	0.5
농산물 품질 개선	2	0.3
농산물관리품 포장지 열악	2	0.3
한미FTA의 올바른 처리	2	0.3
국민들의 의견 반영	1	0.2
농산물 제도 없어지는 것이 좋음	1	0.2
농약관리 철저히	1	0.2
농업의 기업화에서 영세농민에게 혜택있게	1	0.2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지 않게	1	0.2
생산자.상품품질 정보 제공	1	0.2
소비자가 직접 참여했으면	1	0.2
일이 많아 번거롭다	1	0.2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확보	1	0.2
절차가 까다롭다	1	0.2
정확한 기록	1	0.2
집행공무원의 적극적 참여	1	0.2
투명한 운영	1	0.2
품질좋은 농산물 나올 수 있게	1	0.2
[모름/무응답]	160	26.7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규제순응도 결과보고서

발 행 처

농 립 부

발 행 일

2006. 11.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